

제10회 부금포 발표자료

# 아일랜드(더블린)의 성패로 보는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방향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NK부산은행 차장) 임호철

감수(監修)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교수 윤희성



구분	내용	페이지
아일랜드 (더블린)	개황	01
	경제정책 변천사	02
	경제정책 운영성과	03 - 04
	경제정책 성공요인	05 - 16
	경제정책 한계점	17 - 22
부산	정책제안	23 - 32

아일랜드 더블린을 넘어  
부산을 바라봅니다.





## Republic of Ireland

인구	502만명 (대한민국 1/10)
면적	702만 8천 ha (대한민국 2/3)
수도	더블린(Dublin)
언어	영어(공용어), 게일어
종교	카톨릭(85%), 개신교(3%)
독립일	1921.12.06 (영국 식민지 독립)
1인당GDP	10만 6,509달러(세계2위)
화폐단위	유로(EUR, €)
산업구조	서비스업 60%, 제조업 39, 농업 1%
주요산업	금융, 정보통신, 제약, 농축산, 수산업
국제신인도	A+ (S&P기준)
GFCI지수	25위



## [영국의 식민지 시대] (12세기 후반~1920)

- 토지소유 불평등
  - 종교적 갈등
  - 경제적 제한
- (참조) 1845년 대기근 발생
- 아일랜드 인구의 ¼이상 사망
  - 영국 총지원금 2,000파운드

## [대외 개방형 경제정책 전환] (1955~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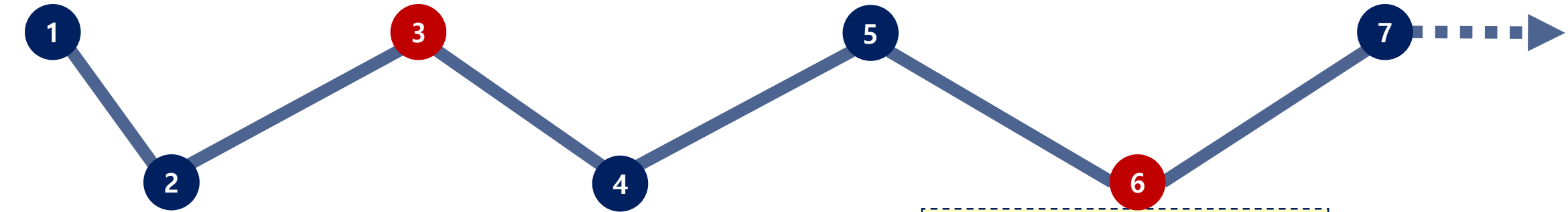
- **개방정책 운영** : 경제다각화/ 외국투자유치/ 국제무역확대 등
  - **정책운영기관설립** : 산업개발청(IDA) 등
  - **EU회원국 가입(1973)**
- (결과) **아일랜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전환**
- **연평균 경제성장률 4.5% ↑, 고용률 1% ↑**
  - **인구성장률 15% ↑ (20만명 인구유입)**

## [공공부문 지출확대 정책 운영] (1973~1983)

- 공공지출 확대 운영
- (결과) 국가부도의 위기직면
- 재정적자 GDP의 15%까지 증가
  - 소득의 60%수준까지 세금부과
  - 약 20만명의 아일랜드인 해외이민

## [구제금융신청 및 재도약] (2008~현재)

- 지나친 외국(투자)자본 및 외국기업 의존성
  - 높은 금융업(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 국내 제조산업 경쟁 기반 취약
- (결과) -7.1%경제성장률 기록 및 구제금융 신청
- 강도 높은 재정긴축(안)수행
  - 사회협약 개정(안)철회, 노동개혁 시행
  - ※ 2013년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 [독립 및 보호주의 정책 채택] (1922~1955)

- 1921년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
  - 자국산업 육성 전략
  - 수입품목에 대한 高관세부과
- (결과) 극심한 경제난 발생
- 약40만명의 아일랜드인 해외이민

## [국내외 경제위기 직면] (1973~1983)

- [국내] 불완전한 노사관계 지속
  - [국위] 1,2차 오일쇼크 (에너지의존도 70%)
- (결과) 국가부채 및 물가상승률 급등
- 국가부채 비중 (GNP 64% → 105%)
  - 물가상승률 20%이상 폭등

## [고성장 경제시기] (1981~2007)

- **사회협약 프로그램 운영 (노사정 협약)**
  - **국제금융중심지 (IFSC)개발**
- (결과) **1.정치적,사회적,경제적 안정기반 마련**  
**2.세계지원혜택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 미국 글로벌 기업의 투자활동 시작(인텔 등)
  - 산업구조 변경 (농업중심 → 지식기반산업)
  - 고도의 경제성장 (7%~11%이상, 약 10년간)

## 글로벌 기업유치

※ 약 1,800개의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 설립  
및 생산공장, R&D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 (2022년 기준)  
· 글로벌 IT기업 (구글,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등)  
·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 MSD, 암젠 등)

**1,800**곳

## 신규 고용창출

※ 미국, 독일, 영국 등 다수의 서방국가들이  
아일랜드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30만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창출함 (2022년 기준)  
· 미국 (20.8만명), 독일(1.5만명), 영국 (1.2만명)  
· 그 외 국가( 6.5만명)

**30**만명

## 펀드 백오피스 중심지

※ 전 세계 투자 펀드 자산의 5.9%를 차지하며,  
3번째 큰 중심지로 선정됨 (2021년 기준)  
· 국내 펀드 순자산 €4.1조, 순 매출액 €3.1천억원  
· 헤지 펀드 특화서비스 운영 (No1 for hedge fund servicing)

**3**rd

## 항공기 리스(특화금융)

※ 전세계 상업용 항공기 리스의 60%이상을 운영·관리  
(2022년 기준)  
· 항공기 금융관련 50년 이상의 전문 지식보유  
· 견고한 법률 및 프레임을 통한 금융정책을 지원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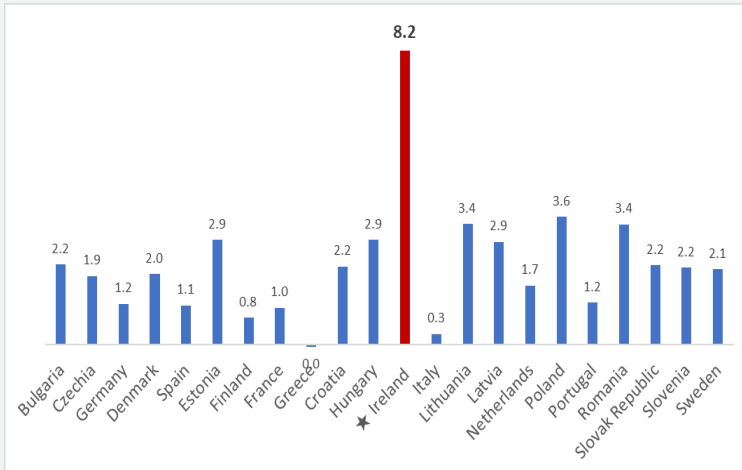
연평균 경제성장률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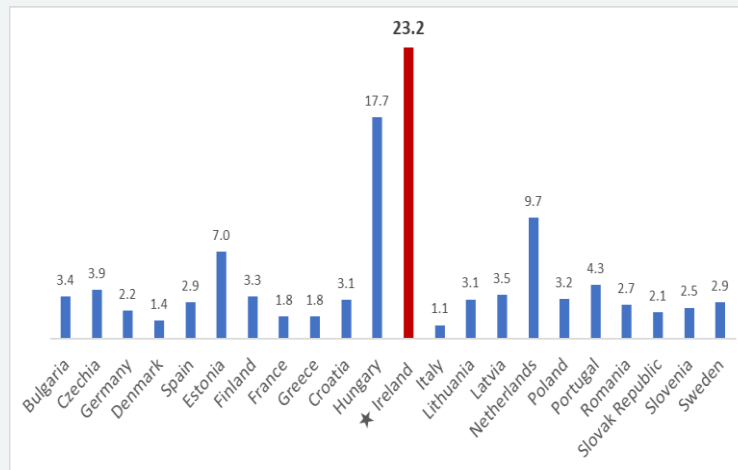
GDP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순 유입비중 **23.2%**



1인당 GDP 세계 **2위**



주) 데이터 추출 : 2012~2022년 (10년 평균)  
자료: World Bank (2024.05.30 기준)



주) 데이터 추출 2012~2022년 (10년 평균)  
자료: World Bank (2024.05.30 기준)  
FDI net flow % of GDP = (Inflow - outflow) FDI/GDP

1위	룩셈부르크	131,384
<b>2위</b>	<b>아일랜드</b>	<b>106,059</b>
3위	스위스	105,669
4위	노르웨이	94,660
5위	싱가포르	88,447
6위	미국	85,373

주) 2023년 기준, 단위(\$)  
자료: 나무위키



## 낮은 법인세율

(20년간 법인세율 12.5% 유지)



## 대외개방정책

(산업개발청 격상, IFCS 설립, 펀드산업 육성)



## 투자 인센티브

(금융법 개정, 입주기업 및 투자자 혜택제공)



## 지리,문화,법률적 유사성

(유럽시장 전진기지 활용)



## 최고의 노동 생산성

(유럽연합 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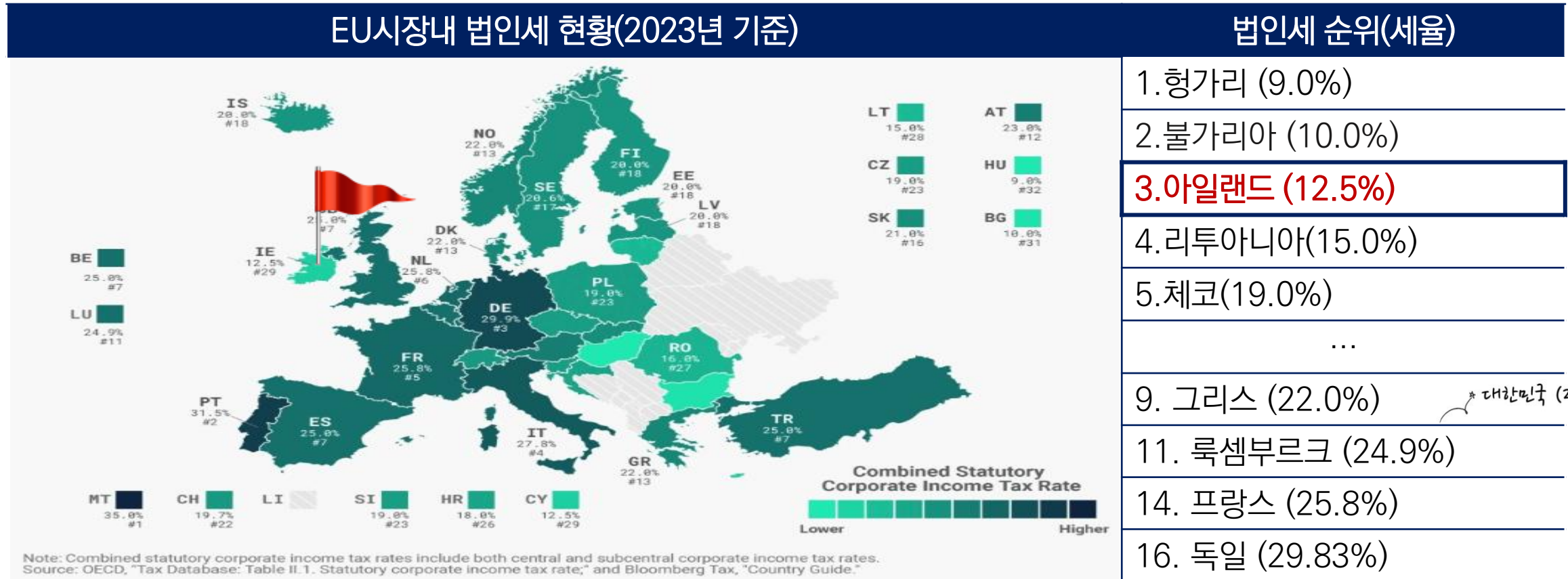


## 사회협약체결

(노사정 협약을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제공)

지난 20년간<sup>주)</sup> 아일랜드는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운영하며 유럽국가 중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전함

주) 2003~2023년까지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며, 2024년 부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따라 15% 인상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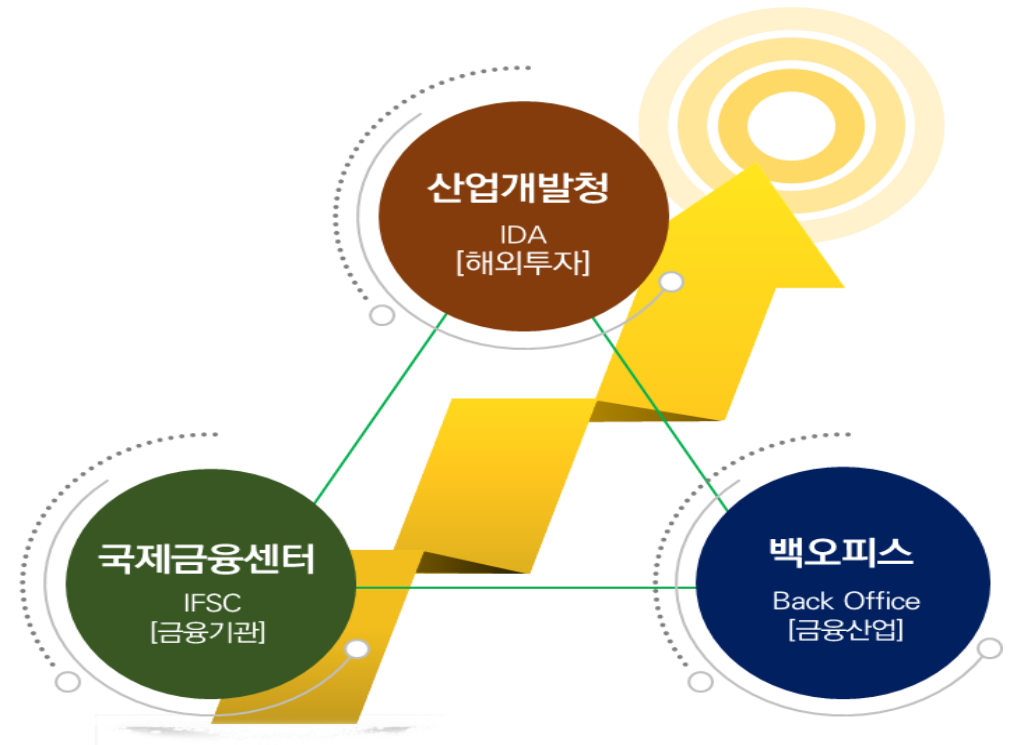


해외자본 및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1955년 「보호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출창조 및 대외 개발형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① 산업개발청(IDA) 설립, ② 더블린 국제금융센터(IFSC) 운영, ③ 펀드 백오피스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대외개방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더블린 탐방: Spire of Dublin〉



※ (참조)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이 영국을 앞지른 것을 상징 (2003년) 기존에 위치하여 있던 벨슨 기념비를 폭파 후 경제성장을 기념하는 의미로 만든 랜드마크



## ①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DA)

- 설립(1949년) : 관세 및 쿼터업무 목적
- 기능격상(1950년): **해외직접투자(FDI)** 및 기업창업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산업개발청은 **전세계 24곳에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강한 권한 및 고도의 운영 자율성을 부여 받아 아래의 업무를 수행함

### IDA주요역할

-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업정책 입안** 등 책임부여
- 산업공단 개발 및 투자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인프라 지원**
- **투자조건협상 유인책 마련** 및 투자업체의 사후관리 수행
-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한 기업과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지원



## ② 더블린 국제금융센터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re)

- 1987년 도시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5.8ha(4만8천평) 면적 내 사무공간, 호텔, 음식점, 주거공간, 소매점 및 국립캠퍼스 소재 시킴

더블린 국제금융센터는 **세제지원지역(Tax Incentive Zone)**으로 EU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일랜드 금융시장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함

### IFSC주요업무

- 기금관리 및 보관업무(Fund Administration and Custody)
- 기업금융업무(Corporate banking)
- 기업자금운용업무(Corporate Treasury Operating)
- 각종보험업 등

※ 더블린 IFSC내에서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금융법 (Finance Act 1987)과 하위법률로 명시



### ③ 펀드 백오피스 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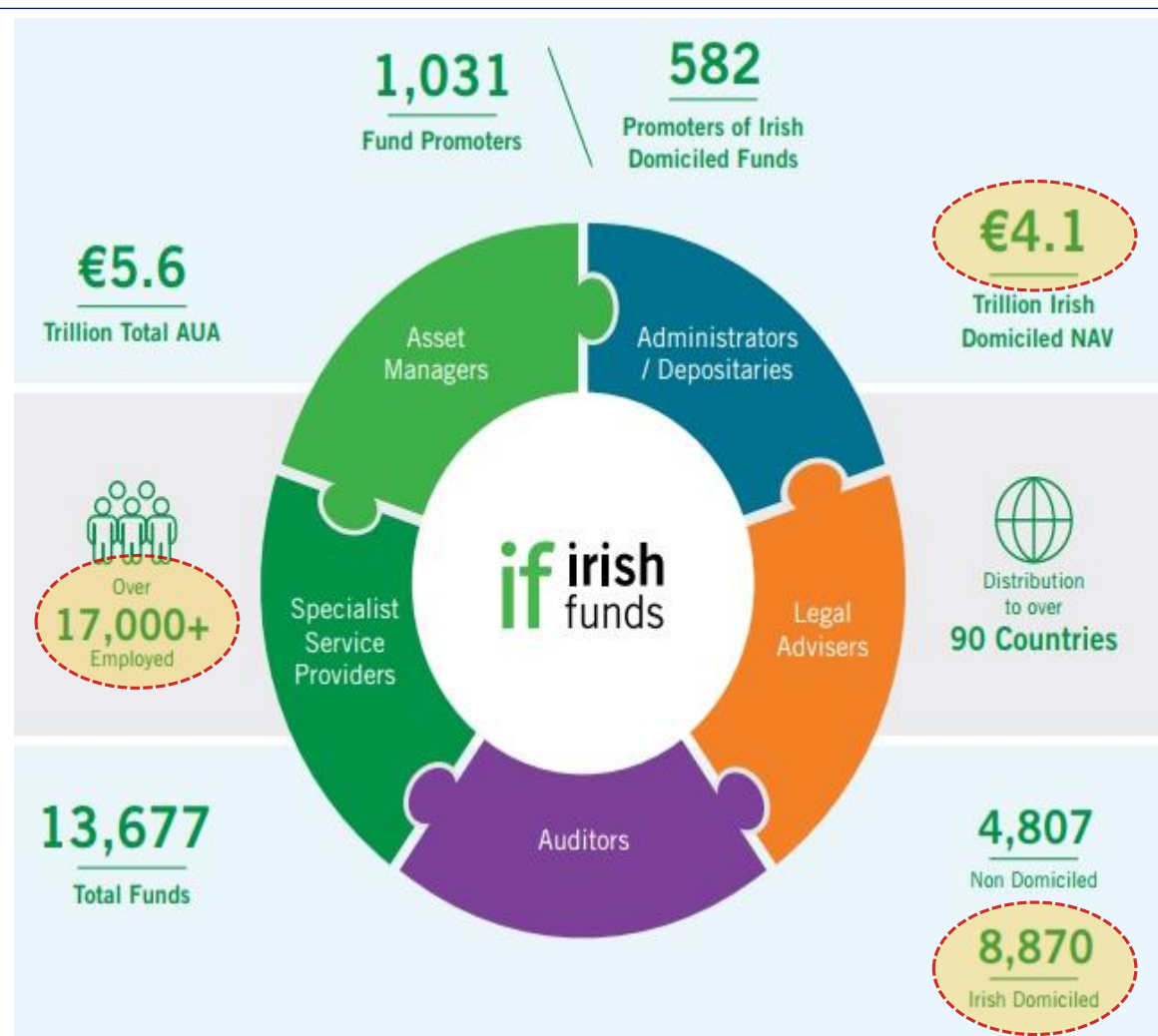
- 펀드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전인 1980년 펀드 시장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침

국제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영국의 프론트 업무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력 고용 창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백오피스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 및 운영

#### 백오피스 지원정책

- IFSC개발과 함께 확보된 금융 전문가, 변호사 등 우수한 인력지원
- 대표적 유럽 공모펀드인 UCITS가입을 위해 유연한 법구조 개정
- 펀드 관련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공제혜택 등 제공

※ 2023년 기준 사무수탁회사,보관회사,판매사,회계법인, 법률회사 등 550개 이상 기업 운영  
 ※ 더블린을 포함한 주요지역에 3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1만 7천명 이상 종사  
 ※ 펀드사업 노하우를 통하여 헤지펀드 수탁업무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특화된 센터로 평가됨  
 ※ 아일랜드가 운영 및 관리하는 펀드 8,870개, 순자산 €41조 유로로 집계됨



「IFSC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아일랜드 금융법 1995」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IFSC로 사업체 본부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 IFSC발전의 촉진 역할을 담당함

## IFSC입주기업 인센티브 (2005년 폐지)

☆ **고속감가상각**  
(법인세 절감효과)

- IFSC건물을 구입한 소유자에 대하여 첫 해 100% 감가상각 인정
- IFSC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에 대하여 첫 해 54% 감가상각 인정 및 매년 4% 고정률 감가상각 인정
- 신규 장비 구입시 첫해 100% 감가상각 인정

☆ **세금면제**  
(금융거래 및 소득관련)

- IFSC입주한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UCITS 등 일부 투자펀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헤지펀드에 대한 **자본이득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 IFSC입주기업 및 직원, 연금기금, 공동투자기금, EU회원국의 기업 등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아일랜드 금융법 (Finance act 1995)

☆ **법인세 미과세**

- 아일랜드에 소재하며
- 신규고용 창출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유입을 가져오는 금융기관 및
- 해외지사 활동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미과세함

① 미래 첨단기업, ② R&D연구센터 및 ③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지원 및 산업별 국제시장 경쟁확보를 위하여 조세 중심의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식개발 박스제도**  
(최대 50% 법인세 절감)

- 첨단기업 유치(IT, 제약, 미디어 등)를 위하여
- 지식재산권(IP)관련 수익에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지식개발 박스제도 운영
- 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미만(≒1조원) 기업을 기준으로 실효세율 최대 6.5%까지 낮추어 적용가능

☆ **R&D관련 세제지원**  
(최대 32% 법인세 공제)

- 시장 타당성 분석 및 R&D연구개발 등 활동시 최대 25.0%의 세금공제 혜택 제공
- 미디어 관련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대 32%의 세금감면 혜택 제공

☆ **외국 투자자 지원제도**  
(최대 30% 소득세 감면)

- 세금, 비자, 생활비 등 아일랜드 입국과 관련된 종합 솔루션 제공
- 해외 기업세무 컨설팅 및 해외기업 주재원 대상으로 자녀 교육 컨설팅 지원
- 해외기업 아일랜드 주재원에 한하여 발생소득의 3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별지정인 인센티브 프로그램(SARP)」 운영 (2025년까지 한시적 운영)

☆ **기타**  
(산업별 법인세 면제)

-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수익금에 대한 세금면제 및 감면혜택 제공
- 항공기 금융관련 파산 및 채권자 권리보호 등의 법적 장치 마련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중간지점에 위치함에 따라 **EU시장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으며**, EU국가 중 유일한 영어 사용 및 영미법 적용 국가로 지리적 접근성 및 **공통문화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 네트워크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음



**EU회원국**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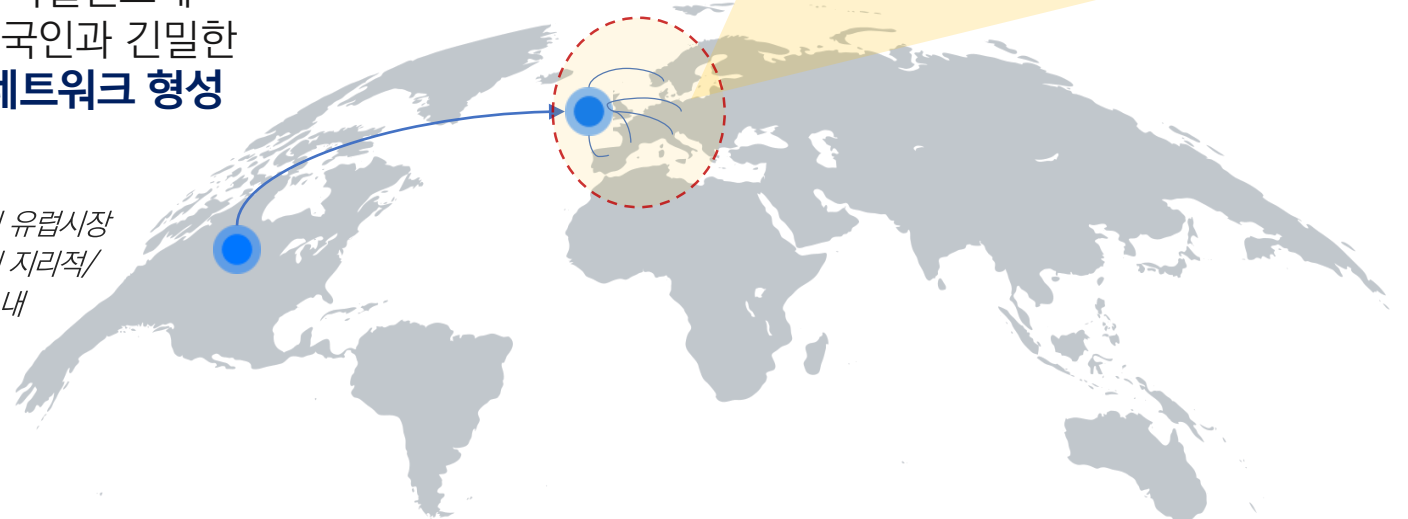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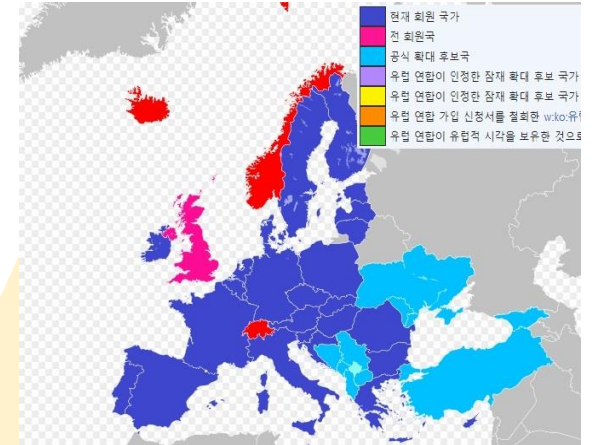
북아메리카  
및 서유럽의  
**중간지점**



**EU국가 유일의**  
**영어사용**  
영미법 적용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브렉시트(Brexit)를 통한 반사이익 공유

2016년 영국의 EU연합 탈퇴에 따라 메릴린치 및 바클리즈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유럽시장 대체 전략기지로 더블린을 선택하여 이동함, 이는 아일랜드의 대기업 운영정책 및 지리적/문화적 이점이 반영된 결과로 브렉시트(Brexit)사건을 통해 아일랜드가 유럽시장 내 반사이익을 향유하는 결과로 나타남

출산장려정책 및 대학 무상교육정책 등을 통하여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젊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및 STEM분야에 있어서 EU평균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확보함에 따라, 전세계 1위의 노동생산성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함

☑ EU국가 중 가장 젊은 노동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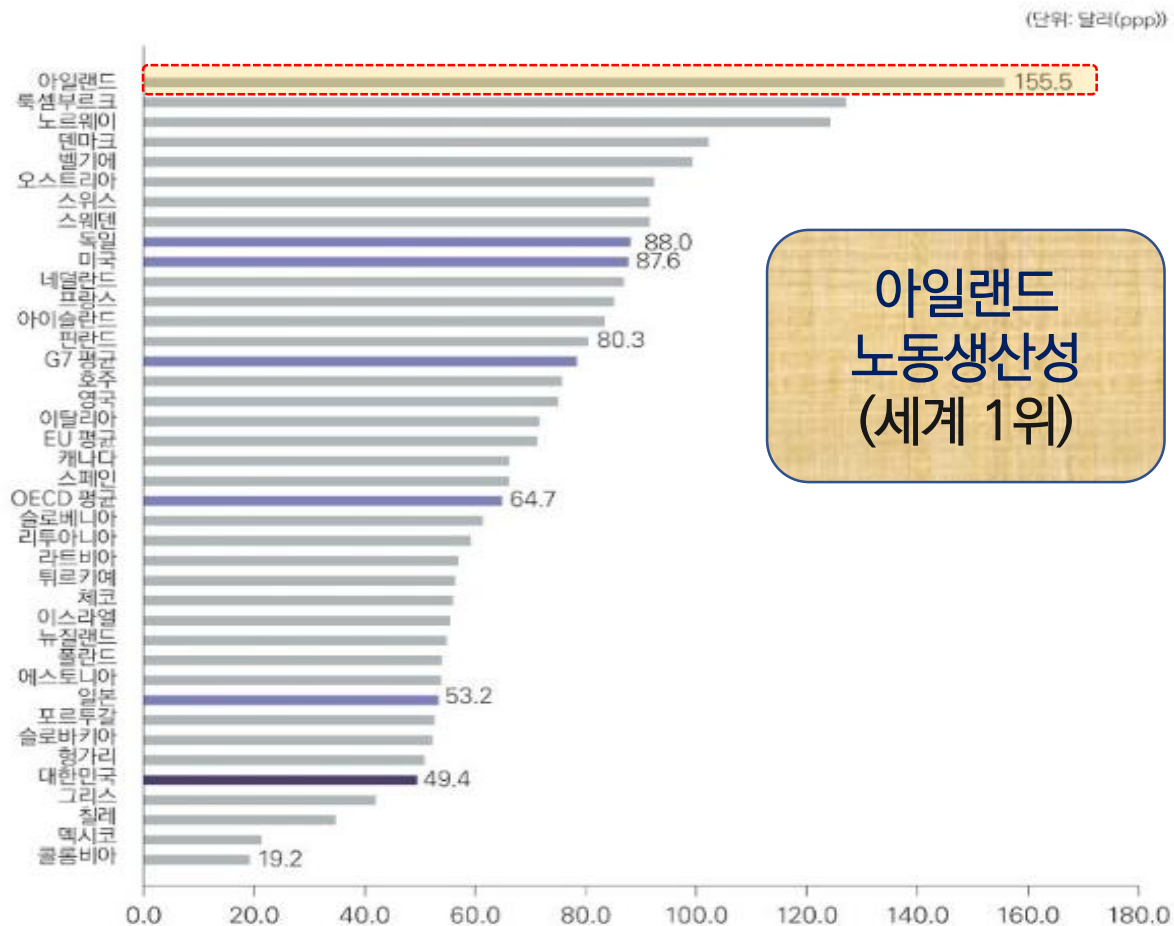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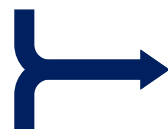
10년간  
인구 증가율  
**11.5%**  
유럽평균(2.2%)

25세 이하  
인구비중  
**34%**  
젊은 노동력 제공

☑ EU국가 내 높은 교육수준 유지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비율  
**55.4%**  
유럽평균(39.4%)

STEM  
분야졸업생  
**36.9%**  
유럽국가 최고수준



아일랜드  
노동생산성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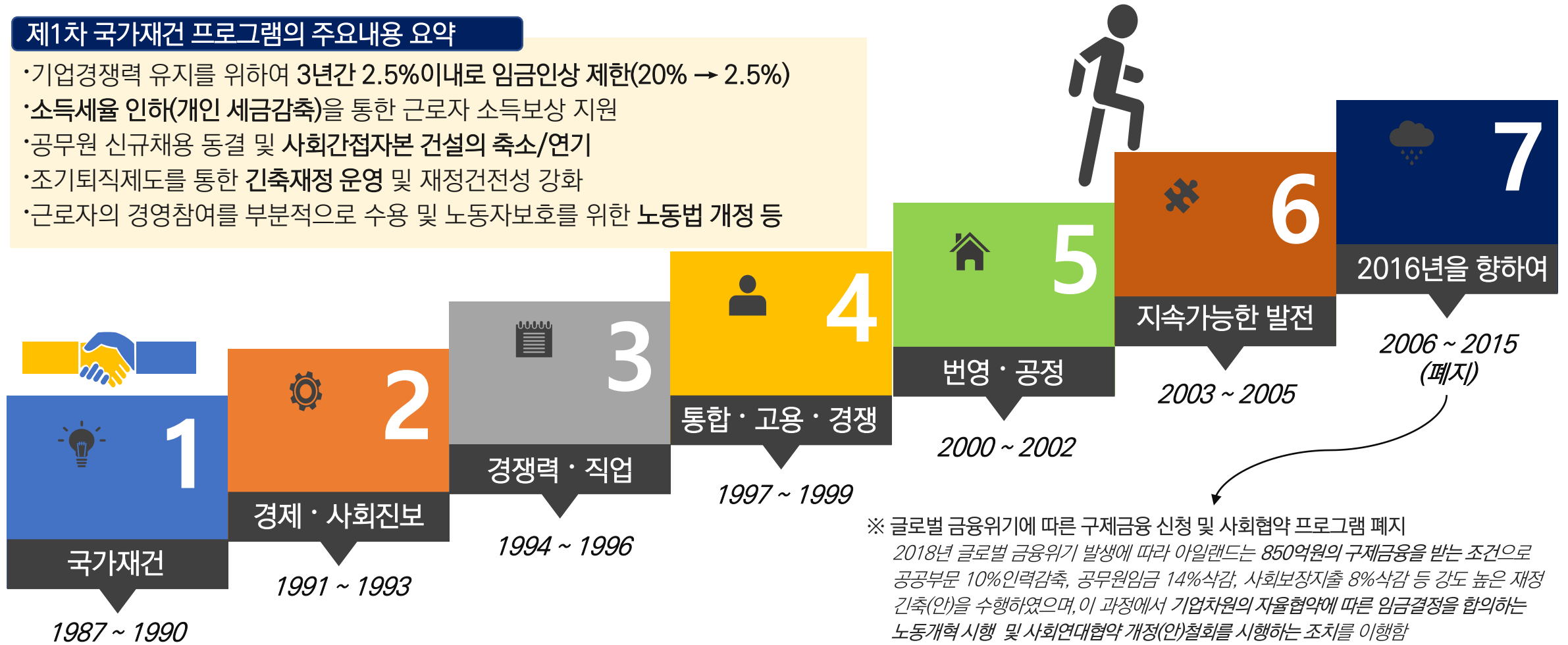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사회협약을 통해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집단의 대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 노사관계 및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 안정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로 외국기업 투자유치 견인**)

### 제1차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요약

-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3년간 2.5%이내로 임금인상 제한(20% → 2.5%)
- 소득세율 인하(개인 세금감축)을 통한 근로자 소득보상 지원
-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축소/연기
- 조기퇴직제도를 통한 긴축재정 운영 및 재정건전성 강화
-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부분적으로 수용 및 노동자보호를 위한 노동법 개정 등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구제금융 신청 및 사회협약 프로그램 폐지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아일랜드는 85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공부문 10%인력감축, 공무원임금 14%삭감, 사회보장지출 8%삭감 등 강도 높은 재정 긴축(안)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차원의 자율협약에 따른 임금결정을 합의하는 노동개혁 시행 및 사회연대협약 개정(안)철회를 시행하는 조치를 이행함

구분	주요내용	상태
낮은 법인세율 <i>(유럽연합 내 2위)</i>	· 20년간 법인세율 12.5% 유지하는 조세 정책 운영	2024년 일부개정
과감한 대외개방정책(FDI)	· 산업개발청 기능 격상 (Industrial and Development Agency, IDA)	유지
	· 강력한 재정지원을 통한 더블린 국제금융센터(IFSC)설립 및 운영	유지
	·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산업(백오피스) 선정 및 지원	유지
다양한 투자혜택	· 아일랜드 금융법(Finance Act 1995)을 통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	세법 통합법으로 개정
	· IFSC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2005년 종료
	· R&D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대한 세제혜택 제공	유지
지리적/문화적/법률적 유사성	· 유럽연합(EU) 가입(1973년) 및 유럽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활용	유지
	· 유럽연합(EU) 내 유일한 영미법 운영 및 영어 사용국가	유지
	·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높은 경제적,문화적 네트워크 형성	유지
최고의 노동 생산성 <i>(유럽연합 내 1위)</i>	· 출산장려 정책을 통한 유럽연합 중 가장 젊은 노동력 제공	유지
	· 대학무상 교육 등을 통한 유럽연합 중 가장 높은 STEM분야 졸업생 배출	유지
사회협약 체결	·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1차~ 7차)을 통한 유연한 노동환경 제공	2010년 폐지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성 **1**

(전체 법인세의 86.5%를 외국계 기업이 총당)

각종 사회적 문제 발생 **4**

(정주여건 훼손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백오피스 산업에 대한 신흥국의 추격 **2**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경제지표 왜곡 및 재정지출 확대 **5**

(1인당 GDP 과대계상 및 EU분담금 등 증가)

조세회피처에 대한 압력 **3**

조세 회피전략 폐지 및 글로벌 법인세 적용



## 외국자본/기업 높은 의존성

(전체 법인세의 86.5%를 외국계 기업이 총당)



### 특정기업 및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수 의존도

- 아일랜드의 주요 재정수입인 법인세의 86.5%를 외국계 기업에서 총당하며,
- 총당하는 법인세의 55%이상이 매출액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됨

※ (참조1) 글로벌 기업 철수 시 손실예상 규모예측

아일랜드 정책자문위원회의 발간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진출한 미국 10대 기업 절반이 철수할 경우 30억 유로 (약 4조 500억원 규모)의 세수손실이 발생되며,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함

※ (참조2)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한 미래기금(Future Fund)조성 계획

아일랜드 정부는 특정산업 및 소수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수 의존도 및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우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1000억 유로 (약 144조원) 규모의 「미래기금 조성」 계획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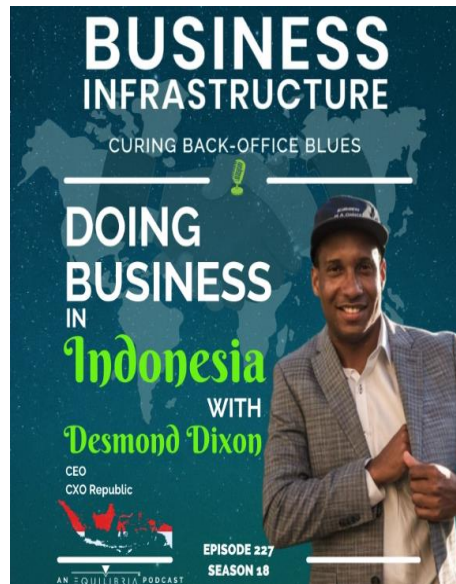
## 백오피스 산업에 대한 신흥 경쟁국의 추격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www.hlb.global/annualreview

※ 폴란드 예시



※ 인도네시아 예시

### 더블린이 가진 유럽 내 저비용 센터의 이점이 점차 축소

- 젊은 고학력 인력이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 직업교육 프로그램 진행 역시 단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발 및 운영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확장 및 전문인력 육성에 한계점 발생
- 동유럽/아시아 신흥 경쟁국이 외국자본 유치 및 신규고용 창출 등을 목적으로 펀드 백오피스 산업관련 영역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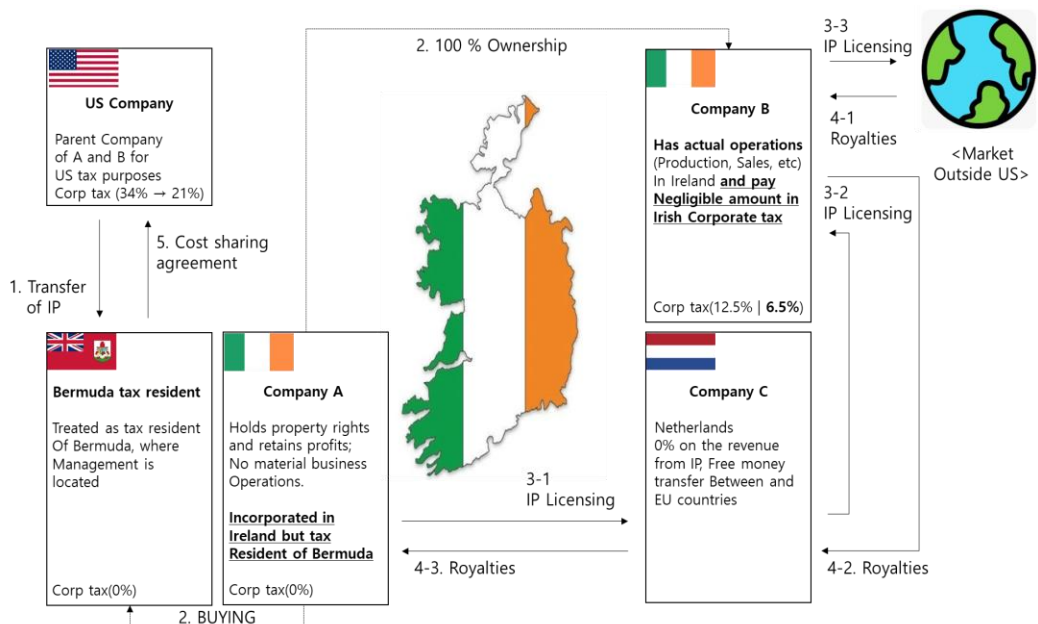
※ (참조) 백오피스 산업관련 신흥 경쟁국

- 동유럽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
-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 조세 회피처에 대한 정치적 압력

(조세 회피전략 폐지 및 글로벌 법인세 적용)



※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strategy

### 조세 회피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정치 압력 발생

- 2014년 세계 각국 규제당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지적재산권(IP)을 이용한 조세회피 전략이 운영될 수 없도록 아일랜드 세법 개정 압력을 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 6년의 유예 기간을 준 후 2020년 이후 **관련 제도 폐지**
- 2021년 미국 등 OECD 131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적용(안)에 대하여** 별도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선에서 **법인세율 인상조치**

※ (참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인상 압력 및 최종 합의  
 2021년 미국 등 131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안에 대하여 아일랜드는 소국(小國)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안하였으나 “국제적 소외국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우려” 별도의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합의(안)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 법인세율 15%로 인상 조치함  
 ☞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미만의 수익을 얻는 기업에 한정하여 12.5%세율 유지  
 ☞ 첨단 기술기업의 경우 6.25% 추가 인하



## 각종 사회적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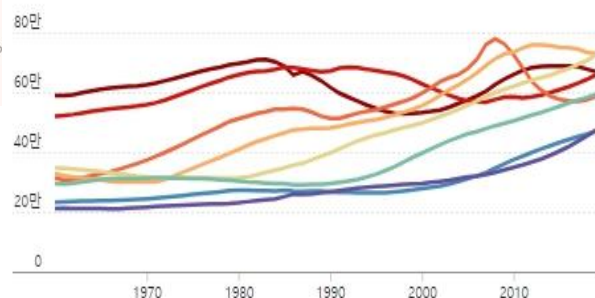
(정주여건 훼손 및 사회적 비용 증가)

House prices sit well above historical levels

Mean Real House Price Index across 12 high income economies



아일랜드 연령별 인구



● 0-9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 70+

※ (데이터 출처) [datacatalog.worldbank.org](http://datacatalog.worldbank.org)

### 사회적 문제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 가능성

- 시장 중심형 주택 정책 운영결과 수요대비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택 및 임대시장의 가격이 급등함
-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74만명) 및 출산율 감소(1.63명)로 고령사회 진입

※ (참조) 제한적인 주택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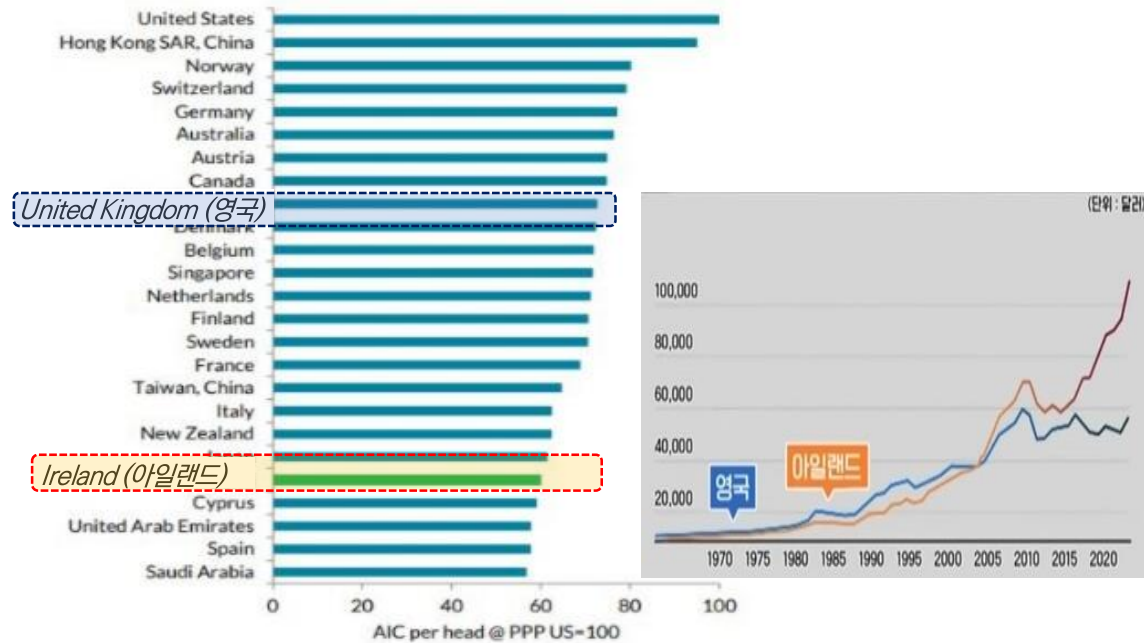
1990년 초 아일랜드는 신자유주의식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민간기업에 주택의 공급을 맡기는 시장 중심형 주택 정책(안)을 채택 운영함. 이후, 아일랜드의 급격한 경제 고도성장 과 함께 유럽통화동맹(The European Monetary Union, EMU, 1999) 발족을 통한 금융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며 주택시장 등에 대한 해외자본의 유입이 용이하게 되었고, 시장 내 주택의 과대 공급 시기가 지속됨. 하지만, 2018년 금융위기로 아일랜드의 주택시장은 위축되었고 (최대 57% 하락), 2013년 경제 회복 후에도, 기존 주택공급정책을 유지 하면서 주택의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택 및 임대가격이 급등함

☞ 2023년 긴급 숙소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11,754명이고 이중 70%가 아일랜드인으로 집계되며,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아파트 평균 월 임대료가 € 1,513로 현재도 급증하는 추세임



## 경제지표 왜곡 및 재정지출 확대

(1인당 GDP 과대계상 및 EU분담금 등 증가)



Source: World Bank (ICP 2017 index.xlsx)

### 외국인 투자활동이 국민소득 재분배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발생

-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3분의 2가 유령(Phantom)이라 추정하며<sup>주1)</sup>
- 1인당 GDP기준으로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부유하게 보이나
- 실제 국민소득은 영국인보다 10%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됨

주1) IMF연구, *Almost two-thirds of irish FDI is 'phantom'*  
(THE IRISH TIME, 2019.09.09)

※ (참조) 왜곡된 경제지표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親기업정책을 바탕으로 많은 글로벌 IT센터가 아일랜드에 입주하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기업본사 등이 소재한 타 지역에서 진행되며, 연구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에 계상함.  
 경제지표의 통계적 왜곡으로 전이되어 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연관없이 정부의 재정지출<sup>주2)</sup>을 확대시켜 국가 경제의 위축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존재  
 주2) EU 분담금 지출, 외국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부산의 현주소

1

(해양산업)  
조세특례  
정책지원

2

(해양금융)  
선박조각  
투자허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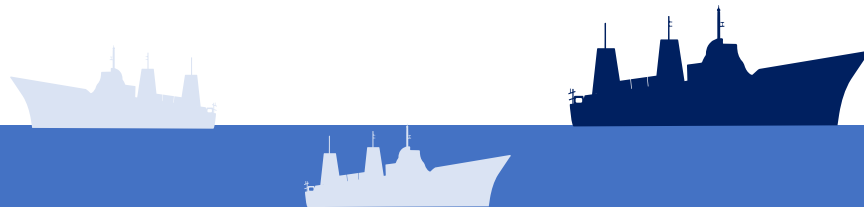
(부산중심지)  
홍보/투자  
전담기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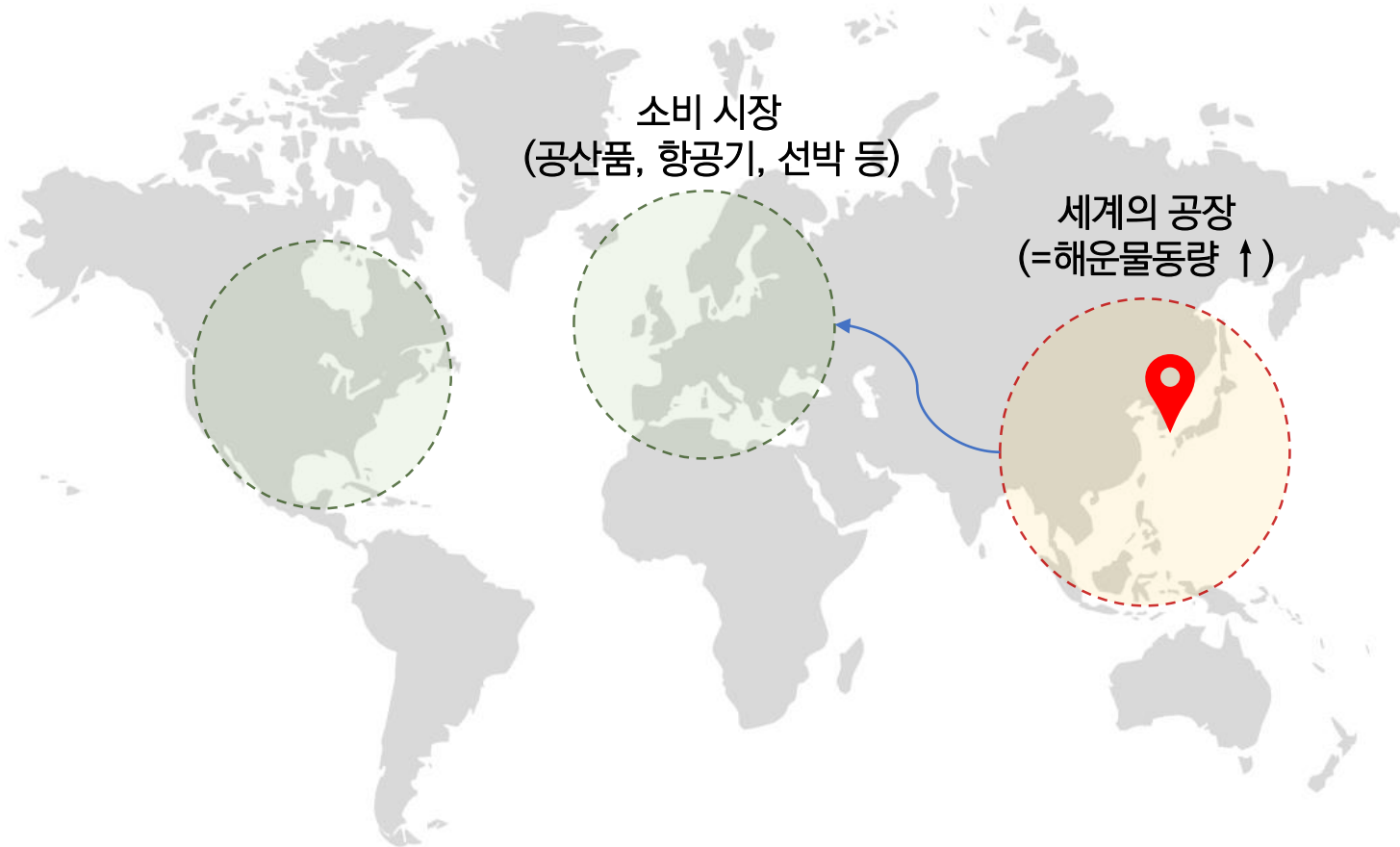
(해외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5

(해양인력)  
융복합형  
인재육성



부울경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선박 공급처(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은 중국/일본 등 세계의 공장과 서구 소비시장을 잇는 회랑(Corridor)에 위치하여 서구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도시임



조선  
세계 2위  
국가별 조선 인도량

해운  
세계 6위  
국가별 상선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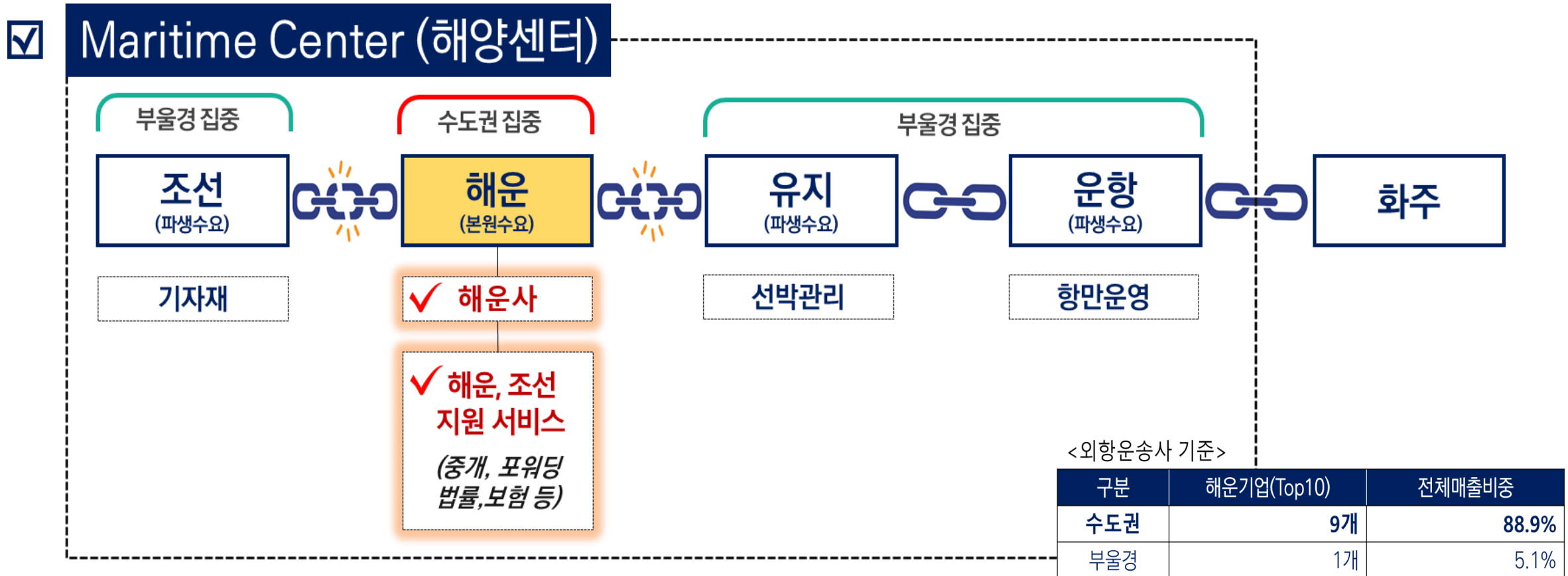
환적항(부산)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기준

선급  
세계 7위  
등록선대 총톤수

해양금융  
중심지 ?  
GFCI 27위 (부산)



부산은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이 성장하는 해양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해양의 본원적 수요를 창출시키는 해운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해양금융중심지의 순기능을 약화시킴**



# 정책제안- 1. 해양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정책지원

부산이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적인 해양 금융중심지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과감한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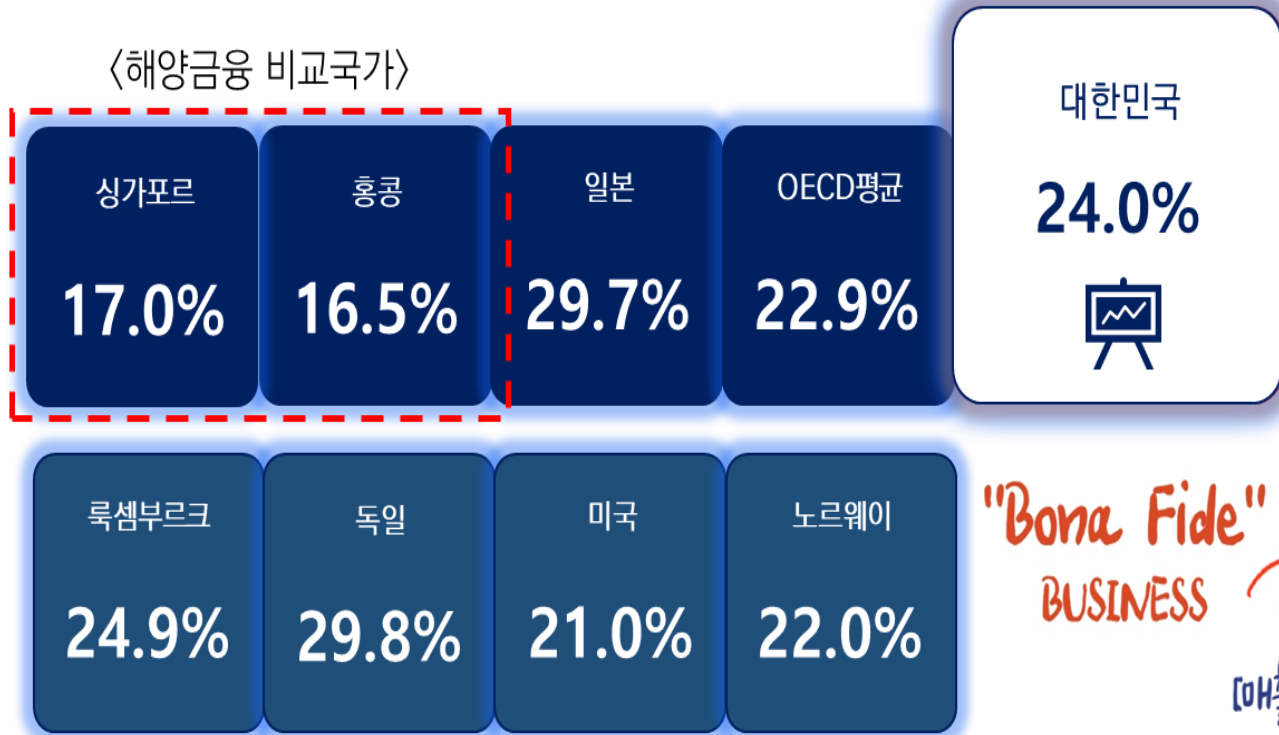


아일랜드

낮은 법인세율

**12.5%**  
(EU 2위)

첨단산업  
6.25%  
(지식개발박스)



"Bona Fide"  
BUSINESS  
[매출/고용창출]



국내 해운기업 본사 부산이전 및 외국 해운기업 지역본부 부산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발생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운관련 지원 기업들도 함께 안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정책 필요함



아일랜드

우대세제지원

항공기리스  
법인세면제

아일랜드  
금융법 1995  
확대적용



## 국제해운기업승인제도 (Approved International Shipping Enterprise, AIS)

“싱가포르 법인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제도”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싱가포르 국적선뿐만 아니라 외국적선에 의한 수익에 대하여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제도

## 해운관련 지원 서비스 (Shipping related Support Services Award, SSS)

선박중개, 선박관리, 화물 포워딩 등 과 같은 부수적인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세금감면)하는 조세제도



## 조세리스 제도 (Tax Lease)

선박에 대한 고속감각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을 발생시켜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세제혜택 일부는 선사에 이전시켜 선사가 선박구매 비용 및 이자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사용하는 금융기법  
(대표적인 사례 : 영국 및 프랑스 Tax Lease 및 일본 JOLCO 등)

우수제도 도입



IMO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박 투자소요액이 약 142조원** 규모로 정책금융에 의존한 자금공급은 제한적임에 따라 **“선박투자 규제자유 샌드박스” 지정** 및 **“선박조각 투자 특화 금융정책” 지원**을 통한 선진 해양금융 산업 육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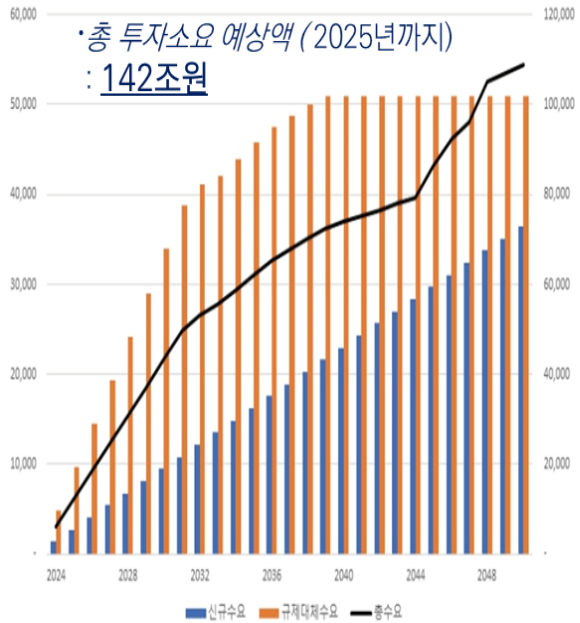
아일랜드

☑ 선도산업육성

기업유치 및  
백오피스  
산업육성  
(인센티브)

고속감가상각  
100%  
(건물/장비)

☑ 국내 친환경선박 총 투자수요 시나리오



※ (출처)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방안, 협동연구총서 2023 (김태일, 윤희성 등, KMI & 한국해양대 공동연구)

☑ 차세대 해운금융 육성방안



※ 조세특례 정책의 운영 범위를 친환경 선박신조 및 조각투자에 맞추어 해양선도(특화)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함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는 부산 특례지역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함]



목표

- ① “해양특화 금융” 육성
- +
- ② “민간금융참여” 활성화



선박투자 규제자유 샌드박스

해양도시 부산을 국외에 폭넓게 홍보하고, 부산 해양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해운관련 해외기업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 및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투자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함



외국계 기업들이 특별지정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역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행정적,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에 입주하는 기업 투자자에게 외국인 전용 주거지역, 의료기관 및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혜택제공

 아일랜드

Tax Incentive Zone

**더블린 국제금융센터 주변지역 (IF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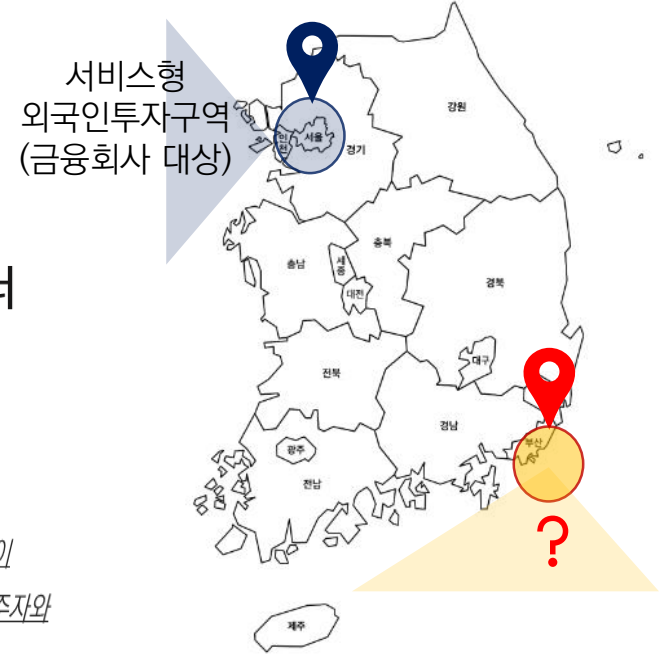
금융산업관련 (자금운영·관리 기업금융 및 보험업 등)



(국외사례 참조) IFSC역외금융시장개방에 따른 고용창출 및 국내은행국제화 기여

구분	1989 (A)	1999 (B)	증감(B-A)
금융기관	46곳	83곳	+ 37%
취업자수	19,700명	31,100명	+11,400명
비거주자 거래비중	22.2%	54.9%	+ 32.7%

※ 더블린은 국제금융센터 설립과 더불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유치되면서 자국민 거래에만 치중하던 국내은행들이 비거주자와 거래를 증가시키며 자국은행의 국제화를 이끌어 냄





미래 해양산업의 성장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융복합형 인재를 해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해운기업의 부산집중화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풀이 부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아일랜드

높은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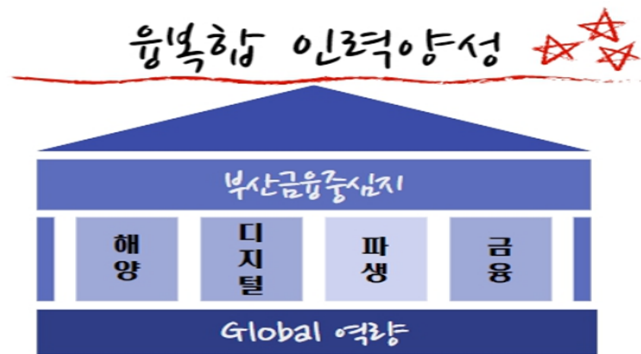
STEM분야  
유럽최고수준  
(인력풀 확보)

고등교육  
품질 세계5위  
(ICT분야 집중)

<해양산업 관련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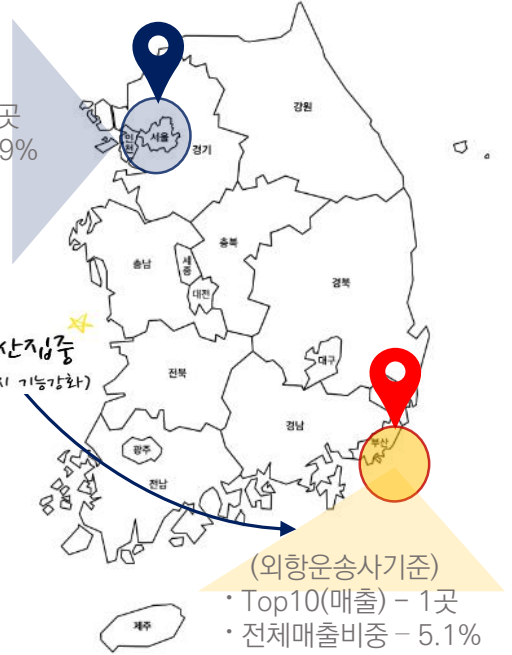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고용인원
해운항만업	항만업, 해운업	101,420
해양관련 서비스업	해양금융 및 보험, 인력공급, 교육, 연구, 기자재 도소매 등	242,282
해양개발 및 제조업 등	항만건설, 선박, 플랜트 제조 등	154,837
기타	해양수산 및 레저관광 등	576,126
총계		1,074,665

※ 출처: 해양수산업통계조사, 해양수산부 2021년 기준



(외항운송사기준)  
· Top10(매출) - 9곳  
· 전체매출비중 - 89%

인력풀 부산집중  
(해양금융중심지 기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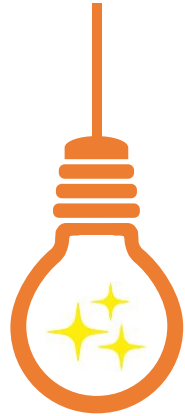


## 조세특례 정책지원

- 세계적 해양금융중심지와 대등한 경쟁수준 유지
- 해운기업 이전유치(국내외)



- 법인세 면제(감면)혜택
- 해외 선진 해운정책 도입
  - 국제해운기업승인제도
  - 해운관련 지원서비스
  - 조세리스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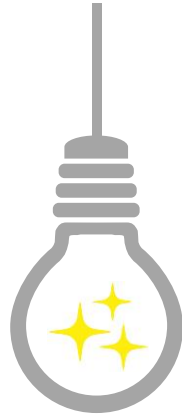


## 선박조각투자 허용

- 해양특화 금융산업 육성 (디지털+해양+파생+금융)
- 민간금융참여 유도/활성화



- 선박투자규제자유샌드박스
- 선박조각 투자특화 금융
  - 조세특례 정책과 병행을 통한 해양선도(특화)산업 육성이 필요 (시너지효과)



## 홍보/투자 전담기구

- 부산금융진흥원 기능확대 (연구/홍보/투자유치/네트워크)
-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관리



- 국외 “부산홍보” 전략 운영
- 기업 투자 가이드 개발
  - 부산의 대외 인지도 확대
  - 세제 및 인센티브 홍보
  - 전략기업 관리 및 유치



## 해외기업 특별지원

- 해운관련 해외기업 확대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능강화
- 부산소재 국내기업 국제화 견인



- 외국인 전용 투자구역 마련
-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제학교확대(교육컨설팅)
  - 근로자 소득세 감면혜택
  - 외국인 전용주거지역, 병원



## 융복합 인력양성

- 미래 해양사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동력 확보)
- 국내외 해운기업에 우수인력 제공



- 인재 양성정책 확대 지원
- 인력풀의 부산집중 정책
  - 부산이전기업 법인세 면제
  - 신규인력창출 기업 보조금
  - 해운전문가(법률 등)세금감면

# 해양금융중심지 (TOP 10!!)



- 감사합니다 -

